

碩 士 學 位 論 文

貧困女性自活事業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2002 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金 義 相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權 海 秀

貧困女性自活事業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The 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
Self-supporting Programs for the
Women

2002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社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義 相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權 海 秀

貧困女性自活事業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The 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
Self-supporting Programs for the
Women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義 相

金義相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6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3

제2장 여성자활사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	5
1. 도시빈곤과 농촌빈곤의 비교	5
2. 여성빈곤층의 특성	5
3. 자립의 이념	7
4. 도시빈곤여성과 대책	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8
1. 복지철학의 변모	8
2.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9
3. 자활지원사업	10
제3절 자활근로사업의 개념	10
1. 자활근로사업의 정의	10
2. 여성자활근로사업의 필요성	12
3. 정부의 여성자활근로사업 지원정책	13
제4절 각국의 여성자활지원사업	14
1. 프랑스	14
2. 영국	16
3. 이탈리아	18
제5절 분석틀	19
1. 대상영역	20
2. 급여영역	20
3. 전달영역	20
4. 재정영역	20

제3장 여성자활근로사업의 조사분석

제1절 조사방법	21
1. 조사대상	21
2. 연구도구	22
3. 자료처리	23
제2절 여성자활근로사업 조사분석	
1. 대상체계분석	24
2. 프로그램(급여)체계분석	37
3. 전달체계분석	44
4. 재정체계분석	50

제4장 여성자활사업의 평가

제1절 대상체계평가	52
1. 성구분이 없는 자활사업	52
2. 가부장적 가족생계모델의 변화	52
제2절 급여체계평가	53
1. 가사노동 연장형 프로그램	53
2. 프로그램의 단순성	54
제3절 전달체계평가	56
1. 자활지원서비스 정보체계 미흡	56
2. 기관의 상호독립성에 의한 자원낭비	57
제4절 재정체계평가	58
1. 자활관련 지방재정 확보 미흡	58
2. 공공근로사업예산의 비 생산성	58

제5장 여성자활사업의 개선방안

제1절 대상체계개선방안	60
1. 여성을 특별히 배려한 자활사업	60

2. 여성이 주된 생계모형 개발과 가사지원 인프라 구축	61
제2절 급여체계개선방안	66
1. 연령대별 단기·중기·장기 여성인력개발정책	66
2.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의 개발	67
제3절 전달체계개선방안	69
1. 전국단위 자활정보종합센터 구축	69
2. 지역간 프로그램 공유와 선택범위확대	70
제4절 재정체계개선방안	71
1. 자활사업재정규모의 확대	71
2.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자활사업으로 전환	72
제6장 결론	73
참고문헌	76
ABSTRACT	79
[별 첨1]	82

- 표 목 차 -

<표 3-1> 설문 응답자 분포상황	21
<표 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5
<표 3-3> 자활대상 연령별 · 성별 · 학력별 분포	25
<표 3-4> 자활대상자 연령별 현황	26
<표 3-5> 자활대상자 학력별 현황	26
<표 3-6> 자활대상자 가구형태별 현황	27
<표 3-7> 응답자 성별 분포 현황	28
<표 3-8> 설문응답자 학력별 분포	28
<표 3-9> 설문응답자 건강상태별 현황	29
<표 3-10> 2001년도 국민기초수급권자 소득 · 재산 선정기준	30
<표 3-11> 근로능력점수표	31
<표 3-12> 자활급여 유형과 점수별 자활사업 수행 기관	32
<표 3-13>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의지에 관한 자활대상자의 욕 구 성별 비교	33
<표 3-14> 성별 일자리경험 차이점 비교	34
<표 3-15> 노동시장진입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의 성별 차이점 ...	36
<표 3-16> 부양가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 성별 차이점	37
<표 3-17> 자활 욕구에 관한 남녀 차이점 비교	38
<표 3-18> 응답자의 남녀별 건강상태	39
<표 3-19> 응답자 연령별 건강상태	40
<표 3-20> 총 응답자의 종목별 훈련욕구조사 결과 분석	41
<표 3-21>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답변한 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욕구 ..	42
<표 3-22> 응답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현황	43
<표 3-23> 법제15조2항에 관련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기관	48
<표 3-24> 2001년도(1~9월간)자활근로사업비 예산 · 집행현황	5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정부와 자활관련기관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자 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들에게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활토록 하려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하고 특히 전문기술 습득과 노동자본 획득에 전통적으로 취약한 여성에게는 남성과 다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현재 성구분 없이 양성 평등하게 제공되는 자활지원은 결과론적인 여성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빈곤여성의 자활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가족부양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는 여성인 경우가 많으나¹⁾ 저학력, 무기술, 무경험 등의 이유로 여성의 노동자본력은 남성보다 낮고 노동시장 진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성의 빈곤화문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나 사회복지관등이 제공하는 각종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은 외견상 양성 평등하게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여성의 환경적 어려운 요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여성차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성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힘쓰는 간병인사업²⁾도 여성을 가사노동에 고착시키고 일의 강도로 볼 때 중장기적인 자활대책이 될 수 없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파출부 등 단순한 가사노동의 연장모델이나 종전의 취로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 김수현,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성동구사례를 중심으로-시정개발연구원, 2001. p.4

2) 자활지원단, “자활근로를 통한 간병도우미사업 활성화방안”, 보건복지부, 2001, p.2.

다양한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는 자활사업은 무경험, 무기술이 심각한 빈곤여성이 더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중장기적인 삶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제공되는 자활프로그램 들은 자립의욕과 자립기반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의존성과 게으름을 조장하는 면이 강하여 참여회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무조건 수급자로 전락하고 마는 자활여건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58%³⁾가 여성이나 실질적으로 자활 지원을 통한 자립율은 4%미만⁴⁾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무성적이고 획일적인 자활사업은 자립의 목표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빈곤여성의 근본적인 자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특성에 맞게 능력개발의 기회와 적합한 일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의욕을 갖게 함으로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생산적 자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도 노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케 하여 노동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찾게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와 육아부담 등으로 여성의 취업과 직업선택의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어 왔고 전문기술의 습득과 교육훈련의 기회 등 빈곤여성들의 자립을 위하여 여성적 입장에서 현행 자활사업을 조사하고 성별 특성화된 수요자 중심의 자활프로그램과 운영방향을 연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3) 김수현 외,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활지원」,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2000. p.5.

4) 김수현,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시정개발연구원, 2001. p.27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이론적인 연구와 설문을 통한 실증 분석을 병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연구한 내용과 본 연구자의 설문을 통한 연구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모든 변수별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각각 비교하여 성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하였으며 여성에 특화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정책반영이 용이도록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설문자료 분석에만 의존함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판단의 오류를 줄이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정책적 가치반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하였다.

셋째, 실증 분석에서는 설문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과 프로그램 상 욕구 등을 수집하고, 선행연구와의 분석결과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넷째, 통계분석기법으로는 dbSTAT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로 성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차이점을 분석하였고 2개이상의 변수가 있는 항목은 다중회귀 분석과 연쇄분석을 통하여 객관적 분석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급여를 받는 자 중 자활근로 참가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자활근로자들과 근로능력과 여건이 비슷하나, 현재 예산상 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건제시가 유예된 경증장애인들과, 근로능력은 유사하나 자활근로사업이 아닌 하위단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봉사 참가자들을 연구범

위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근로사업에 참가하다가 탈락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탈락원인과 욕구가 매우 중요함에도 연구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이 논문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활근로대상자와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성북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의 참가자 대다수가 “취로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보유와 수급자 수 등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성북구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전국적 확대시행을 앞둔 시범운영지역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단위를 확대 적용할 만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장 자활사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

1. 도시빈곤과 농촌빈곤의 비교

도시와 농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이한 발전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서의 빈곤의 성격과 탈빈곤의 기회와 구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활지원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실행과정에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조정되어야 한다. 농촌은 2, 3차 산업의 낮은 고용잠재력과 1차산업 중심이라는 경제기반의 특성과 인적, 물적 등 사회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저인프라의 문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적자본을 고려해야 하며, 도시지역은 불안정한 취업현황,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프라, 2, 3차 산업에 경험이 있는 빈곤자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⁵⁾.

2. 여성빈곤층의 특성

도시빈곤여성들은 저학력, 저임금, 높은 비율의 여성가구주, 건강상의 문제 등이 자활지원센터 의뢰 대상자들의 실태파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 이들의 특성은 인적자본의 취약성, 자립의지 미흡, 자녀문제, 비공식적 지원망 부족, 주거의 불안전성, 기타 공식적 지원체계의 취약성으로 요약된다. 첫째, 인적자본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과반수 정도의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들은 중졸이하의 학력과 평균 연령39세로 현재의 노동시장에

5) 백선희, 2000, “도시지역 빈곤여성의 특성과 자활지원사업의 방향”-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pp1-3

6) 성동여성자활촉진모임 및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저소득 여성가구주 자활촉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과제”, pp32-45

서 임금수준이 낮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집단에 속한다.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며 특히 시설 모자가정 여성가장들의 대다수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자립의지 미흡과 관련,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들은 자격증 획득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거나,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또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양육비의 문제, 그리고 취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자녀보육이나, 자녀학습지도, 자녀와의 대화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넷째,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가족, 친지, 친구나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망으로 부터 물질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하는 집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섯째, 모자가정의 상당수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데 이들은 퇴소후의 주거대책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여섯째, 기타 공식적 지원체계 역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지원수준이 열악하고,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 등이다⁷⁾.

빈곤층의 심적 상태는 버림받은 존재, 천한 존재, 적의심을 갖는 존재, 싫은 무리들의 존재 등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층은 일반인과는 달리 상이한 문화적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운명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무감각하며, 또한 현재 지향적으로서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존의 만족을 연기하지 않거나 연기할 능력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사회적 특성을 몇 가지 요약하면 불안정한 취업형태, 열악한 주거환경, 다양한 질병 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 가족 구성원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고, 무

7)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31권, pp.1-28

기술, 의존성 등의 어려운 형편에 따라 하루살이 생활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취업으로 생활의 곤란은 물론 질병문제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파급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다. 쇼힐(I.Sawhil)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질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조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자립의 이념

자립(self-reliance)이란 남에게 매이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자기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서는 것으로 자신의 집단 속에서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 노력하는 자조(自助)와 구별되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자립의 의미는 타인으로부터 조력(助力)은 물론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빈곤여성과 대책

빈곤여성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크게 개인, 가족, 제도, 사회적 측면이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빈곤여성은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저 학력, 저 기술로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경제활동에서 성공해 보지 못한 경험 때문에 자립의지가 미흡하며, 가족환경 측면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는 가사·자녀양육·간병 등의 가사노동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를 방해받고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자활지원사업의 내용과 여성자활을 지원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 건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①효과적 직업훈련 및 취업 후 재교육으로 인적자본 개발, ② 의료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한 인적자본 유지, ③자활의지 고취 및 취업 후 문제를 위한 상담과 교육, 가족환경 차원에서는 ④자녀양육·교육지원체계 강화, 가사·간병에 대한 지원, 제도적 차원에서는 ⑤여성자활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기초한 자활지원체 수립, ⑥고용창출체계 구축 등 노동시장 확충, ⑦위업알선체계 구축, 정보제공 등 노동시장 참여 기회 제공,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⑧물질적, 정서적 비공식 지원체계 마련 등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⁸⁾.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복지철학의 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그 동안은 시혜적이고 보호적인 공공부조사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을 급여를 받을 권리적인 성격, 국가에 대한 의무적인 성격으로 복지철학이 변모되었다.

즉 ‘보호대상제에서 수급자로’, ‘보호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라는 법적 명칭의 변경은 보호받을 권리, 보호할 의무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국민의 권리로서 기초생활은 보장하되, 인간의 본질적 존재양식인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아울러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통합을 지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격과 주요내용⁹⁾은 첫째, 국가보호를 필요로

8) 이혜경, 1988, “빈곤의 여성화 :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pp. 4-12.

9) 보건복지부,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1, pp. 10-11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인구학적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대상자 구분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였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는 누구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구여건이나 능력을 감안하여 제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부로 보호받도록 하였다. 기초생활의 보장은 생계·주거·의료·장제·교육·해산급여의 등으로 실시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을 목표로 하였다. 종전의 자활사업이 취로사업이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그친 소극적 형태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서비스는 총체적인 자활지원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으로 일할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되, 급여를 받는 자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참여를 의무화해 능력을 향상시켜 자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활사업의 내용은 근로능력이나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취업, 창업지원, 재활치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공제제도¹⁰⁾와 조건부급여제¹¹⁾ 및 자활지원사업¹²⁾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정소득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를 유인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소득·재산조사는 물론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정확한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급여수준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부분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등의 급여구조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¹³⁾.

기존의 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근로와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극히 빈약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낮았다. 이를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되¹⁴⁾ 소득평가액 산정에서는 근로유인을 위한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

3. 자활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책임강화와 함께 자활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과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생활보호제도에서의 자활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크게 강화하였다.

제3절 자활근로사업의 개념

1. 자활근로사업의 정의

자활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자활을 사회

13) 강윤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근로유인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1, pp. 207-210

14)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자활해야하는 대상의 상태에 따라 단계별¹⁶⁾로 구분되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정신적·육체적으로는 근로무능력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될 때, 이를 자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활(지원)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활적인 의미의 자활은 소득과 연결되는 근로활동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정신적·육체적으로는 근로활동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장기적 실직이나 질병, 기타여로 요인으로 의욕을 상실해 가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를 자활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자활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자활(지원)사업이라 하고, 근로를 통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셋째, 자립의 의미이다. 자립에 관한 해석은 「자조적 자립」을 그 의미와 내용으로 사용하였던 자립의 개념이 「의존적 자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¹⁷⁾.

자조적 자립이란 생활자(생활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확보되는 생활자원에 의하여 그 생명 및 활력이 유지, 재생산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의존적 자립이란 비록 일부를 제3자 및 사회복지 기나 사회제도에 의존하더라도 생활의 목표, 사상신조, 장소, 양식, 행동 등에 관해서 가능한 생활자에 의한 자기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제3자 및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보완 및 대체에 의한 경우라도 자기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보장되면 그것은 자립적 생활이 확보 된 것으로 본다¹⁸⁾.

16) 김수현 외, 2000,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활지원],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pp. 14-15.

17) 박용순, [빈곤과 자립], 서울, 학지사, 2001. pp. 120-33.

18) 古川孝順編, 社會福祉21世紀のパラダイムⅡ [方十去と技術], 東京:誠信書房, 1999. p. 67.

일반적으로 자립에 관해서는 신체적 자립, 심리적 자립, 사회 관계적 자립, 경제적 내지 직업적 자립 등이 자립을 구성한 제 측면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생활의 자립을 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신체적 자립, 심리적 자립, 경제적 자립이라는 자립의 제 측면 및 그것이 사람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생애의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하에 획득되고 혹은 상실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정책은 자립의 단계에서도 그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자립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정책을 자립지원정책이라고 한다.

2. 여성자활근로사업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해야 하는 사업대상자로서의 자활의 의미는 특히 재활이나 자립의 의미와는 구분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대상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며, 곧 정신적·육체적으로는 그냥 활동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장기적 실직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의욕을 상실해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를 “비취업대상자 중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비숙련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은 이들의 근로능력의 향상과 상위 자활경로로 진입하는 전 단계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을 업그레이드형과 취로형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다시 두 가지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형의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능력향상을 통해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취로형은 부가적인 소득창출과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¹⁹⁾.

3. 정부의 여성자활근로사업 지원정책

정부는 범부처의 실업종합대책을 통해 다양한 실업구제책²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소득 실업자들이 정부 실업대책에 참여한 비율을 64.4%에 불과하며, 그것도 이용자의 대부분(실업자 전체의 51.4%)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고 인적자원개발이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들은 이 사업이 가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83.8%), 재취업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21.2%), 여성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 욕구가 남성에 비해 높지만, 가사 육아 등의 이유로 공공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의 취업알선대책도 저소득층에게는 별 효과가 없으며 특히 여성에게 그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 실업자중 재취업한 비율이 남성 25.7%, 여성 14.2%로 여성의 재 취업을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비록 여성의 재 취업을 낮지만 취업은 아니더라도 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가까우며 또 재취업도 안되고 소득활동도 안하는 여성 중 44.1%는 그 이유를 가사나 육아 문제로 들고 있다²¹⁾.

19) 보건복지부,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 214.

20) 공공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대여 한 시적 생활보호, 자녀 보육료지원, 창업지원, 기타 기업에 대한 지원, 실업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21) 백선희, “도시지역 빈곤여성의 특성과 자활지원사업의 방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01, p. 7.

제4절. 각국의 여성자활지원사업

1. 프랑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체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 즉 한계계층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비판과 실업자 문제, 노동행태의 변화, 국제경쟁력 심화 등 경제환경과 직결된 위기, 그리고 빈곤과 고립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대두되면서, 1980년대부터는 복지제도의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복지개념이 사회통합정책(Insertion sociale)이다.

사회통합정책은 특정개인을 ‘정상적인 사회’의 영역 밖으로 밀어낼 때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 즉 장기실업, 도시문제, 장애인, AIDS, 인종차별주의, 이민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을 말한다. 여기서 한계계층에 대해서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급여지급을 통해서 빈곤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취업교육, 직업개발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로의 통합을 꾀하고자 하였다²²⁾.

프랑스의 자활사업은 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8년 반소외법의 제정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되기까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왔다. 버림받은 장기 실업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하여 재취업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 EI(Entreprises d'Insertion), 즉 사회재통합기업이다. EI기업의 업종은 건축, 공원조성 환경미화, 쓰레기분리수거, 음식제조, 인쇄, 작은 기계조립, 포도공장, 컴퓨터 재활용, 작은 채소 재배업 순으로 많다²³⁾.

프랑스의 대표적 자활기업사례로는 우아니의 생산협동조합 ‘베르바(Verbat)’와 앙비의 가전제품 재활용사업을 들 수 있다. 우아니 생산협동

22) 심창학, “프랑스의 사회복지의 변화”, 『세계의 사회복지』, 1999, pp. 200-202.

23) <http://www.kwnet.org/dataroom.htm>, “유럽스터디투어. hwp”,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2001, p. 14.

“베르바(Verbat)”는 직업소개소의 상담을 마친 실직자의 훈련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를 받으며 훈련과정을 마친 그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훈련을 마친 연수생들이 노동자생산협동기업(scop)을 만들어, 시장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보수, 도색, 간이 주차장, 유적지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맡아 하고 있는 사례이다.

초기에는 시를 상대로 발주요청을 했으며, 이후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수주를 받고자 노력하였다. 수입은 일용직으로 일할 당시와 비슷하나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²⁴⁾.

프랑스의 재활용기업 앙비(ENVIE)는 몇몇 꼬뮌(Commune)연합의 요구에 의해 애마위스라는 사회단체에 의해 창설된 기업이 1989년부터 여러 꼬뮌의 폐기물을 수집하면서 시작되었다.

작업의 내용은 폐기된 가전제품을 전자제품 회사, 지자체, 일반인들로부터 수거, 수리한 다음 재사용할 수 있는 것과 철, 비철금속으로 나누어 분해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판매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제품회사에 판매한다. 1989년 탄생 이래 13년 동안 2000명의 실업자가 앙비를 거치면서 18개월 동안 직업 편입 훈련과정을 마쳤고, 그중 60%가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동안 수거제품 판매수입으로 재정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13년 동안 3천만 프랑(한화 약 5억 4천만원)이 실업자의 직업편입 프로그램에 위해 투자되었다. 수거되어 처리된 전자제품의 수는 1989년 14,500개에서 매년 증가하여 1999년 6월 현재 250,000개에 달하고, 이중 수거 판매된 제품의 수는 1989년 3,000개에서 1999년 6월 현재 60,000개에 달하여 전국에 걸쳐 28개 기업과 5개의 연락소를 두고 있다²⁵⁾. 앙비의 운영은 수거된 전자제품의 수리와 분해로

24) 김수현,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조건과 과제』,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획단, 2000, pp70-71

25) 김신양, “대안의 경제시스템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또는 제3
섹터”,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2000, p.37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폐기된 전자제품을 완전 분해하여 남김없이 재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영역을 개척했고 일반 기업들이 환경문제에 민감해 지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²⁶⁾

프랑스의 자활기업은 의류, 가전제품, 컴퓨터 재활용 등 각종 재활용사업과 소규모 건축사업 등은 우리의 자활사업 사례와 접근종목에 있어 유사하다. 이러한 기업활동에 참여하여 2년간의 기능습득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집수리사업단 등 우리의 자활사업 사례들이 대상자들이 능력과 불일치하여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실정에 맞는 사업종목인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시되어야 한다.

2. 영국

영국은 1996년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복지체제가 개편될 당시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있었다. 정부 복지비의 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소득 불평등의 격차는 심해지고, 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축소신고, 받아야할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장기 실직자, 임시직의 증가 등으로 복지개혁에 대한 높은 요구가 대두되게 되어, 이에 새롭게 등장한 복지체제가 바로 제3의 방법이다. 기존의 잔여적 복지모델을 강화시켜 극빈자나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회귀할 수도 있었고, 제도자체를 유지하면서 관대한 복지정책을 쓸 수도 있었지만, 영국정부가 선택한 것은 기존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기회를 증진시키며, 현재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이 제3의 방법의 핵심이다²⁷⁾.

26) 신명호 외, 『자활생산공동체운동의 길잡이』, 한국도시연구소, 2000, p.73

27) 양동주,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활지원』, 삶의 질 향상 기획단, 2000, pp. 12-15.

3.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자활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상계층은 불구자, 상이군인, 산재자, 미망인과 고아, 지체장애자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과 사회보장 정책의 미발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체 장애자, 정신질환자, 약물이나 알콜 중독자, 문제 청소년, 그리고 저하력·비숙련의 장기 실업자를 포괄한다. 이곳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겪는 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나 알콜 중독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작업시간에 배정되어 있다.

그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의 일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임금을 충당한다. 아울러 직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사회적 협동조합 내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습득한다³⁰⁾.

이탈리아의 사회적 서비스 사업으로는 가족서비스와 탁아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주거환경, 쓰레기 수거, 도심환경개선, 문화 및 유적지 정비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이들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이 두가지 유형의 자활기업은 사회서비스에 약 8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지역환경서비스 사업에 23,00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³¹⁾.

자활기업이 복지·환경분야에 대대적으로 접근한 사례로서 우리의 각종 복지도우미사업,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등의 고용창출 효과와 전국적 자활기업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30) 김신양, "내안의 경제시스템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또는 제3섹터",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2000, p. 31.

31) 김수현 외,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활지원」,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2000 p.74.

1. 대상영역

빈곤층의 적용대상자의 자격과 범위에 따른 원칙으로 자격요건에 대하여 Gilbert와 Specht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①귀속적요구(attributed needs), ②보상(compensation), ③진단적 구분(diagnostics differentiation), ④자산조사에 대한 요구(means-tested needs)등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소득·재산 평가액의 일정 기준이하에 있는 자가 보호신청을 하면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여부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2. 급여영역

수혜대상자가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급여의 성질과 형태에 대한 선택을 말한다. 사회보험의 급여가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공적부조는 욕구가 드러난 사후에 이들 욕구를 선정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사회보험의 급여를 보완하는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전달영역

사회의 급여를 수혜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메카니즘으로 급여를 누구에게 얼마나 제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급여를 어떤 행정적 조직을 통해 시행하는가에 관한 영역이다. 전달체계의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신속한 대처와 적응을 하면서 정책과 수혜자의 욕구충족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재정영역

사회급여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과 활용관리에 대한 일련의 선택으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관리방식도 중앙집권적 방식과 지방분권적 방식 기타 혼합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3장 여성자활근로사업의 조사분석

제1절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2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확정된 최저 생계비에 미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보장 신청을 하였고,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인 주로 30대 이상 50대 이하의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자들이어서, 당장에 노동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당기간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상자들이다.

설문조사는 해당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배부된 총 122부 가운데 10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재사항이 부실한 5부의 응답자에 대하여 보완설문을 거쳐 100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 응답자 분포상황

(단위: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합계	34	66	100
30세 이하	0	1	1
30 ~ 40세	1	18	19
40 ~ 45세	11	14	25
46 ~ 50세	14	13	27
50세 이상	7	20	27

2. 연구도구

설문조사는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는 방법으로 100부가 회수되어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별첨1)는 9개 분야로써 첫째 : 성별, 연령, 가족부담 등에 관한 기초도구, 둘째 : 학력, 기술과 경력에 관한 능력 측정도구 셋째 : 질환보유여부 등에 관한 병력측정도구, 넷째 :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취업장애 측정도구, 다섯째 :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 측정도구, 여섯째 : 자립할 의지가 있는 지에 관한 기본적 자활의식 구조 측정도구, 일곱째 : 대상자가 정부에 바라는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욕구측정도구이며, 여덟째 근로능력과 희망근로형태에 관한 성별 특성 측정도구 아홉째 희망진로에 관한 욕구측정도구 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기초자료에 관한 설문

성별, 연령, 학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와 자활프로그램 참여시 평균 처리소요 시간과 근무시간 등에 관한 자활근로에 관하여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신체적 정서적으로 근로의식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에 관한 설문
만성질환의 정도나 특별히 치료를 받을 수준은 아니나 신체나 정신적으로 피폐하여 근로의욕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에 관한 설문은 2개이다.

(3) 직접 취업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변수에 관한 설문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으로 영아보육, 장애인, 몸이 불편한 노인 등 부양가족구성요인에 관한 2개 지문, 경력과 기술 등 숙련도에 관한 4개 질문 등 16개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4)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에 관한 설문

구청, 동사무소, 종합복지관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직종을 묻는 설문 1문항에 11개 직종과 참여프로그램의 노동의 강도와 소요시간을 묻는 1문항, 참여기간과 만족도를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자활의지에 관한 설문

스스로 생계를 끌어갈 의지와 근로의욕을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설문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 정부와 사회에 지원요구에 관한 설문

자활사업참여자로서 향후 자활의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진정 정부와 사회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 5개 문항과 일반 노동시장의 어떠한 일자리를 희망하는지를 묻는 1문항과 10개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7) 구체화된 자활프로그램 욕구측정설문

훈련기간 중 생계지원하에 직업훈련의 희망직종과 11개 업그레이드형 일자리에 관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 개인의 취업장애 유형에 따른 희망근로형태인 FULL근무제와 PART근무제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처리

1)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dbSTAT(Data Base STATistic: 데이터베이스 통계분석)프로그램³⁴⁾을 이용하였다. 빈

34) 설문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dbSTAT(DataBase STATistic : 데이터베이스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김수녕 : 윈도우용 통계소프트, 2000년, 건국대교수)이다. dbSTAT for Windows로서 통계마법사가 있어 분석하고자할 변수의 수 및 특성에 따라 자동으로 적절한 통계방법을 선택하여 통계결과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1)조사대상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지역은 교통의 중심과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대도시지역으로 국민.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는 5,389명이며, 이중 조건부 수급자는 237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이 99명(42%), 여성이 138명(58%)으로 여성비율이 높으며 전체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78명(30%), 비취업대상자는 159명(70%)이며, 41세 이상이 155명(65%)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고령자의 비율이 높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타지역보다 비교적 더 필요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3-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성북구

(단위:명)

총 수급자	근로 능력자	총수급 자 대비 근로 능력자 비율	근로능력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자활 특례 자
			소계	근로능력자 대비 조건부수급자 비율	취업 대상 자	비취업 대상자	소계	취업 상태	가구 여건	환경 적용	5·6급 장애인	
5,389	1,110	21%	237	4.4%	76	161	846	599	157	24	66	27

자료: 성북구청 2002년도

<표 3-3> 자활대상 연령별·성별·학력별 분포

성북구

(단위:명)

<표 3-4> 자활대상자 연령별 현황

성북구

(단위:명)

연령대	합계	근로능력자								자활 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소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소계	취업 상태	가구 여건	환경 적용	5·6급 장애인		
계	1,110	237	78	159	846	599	157	24	66	27	
18세미만	-	-	-	-	-	-	-	-	-	-	
18~20	58	28	28	-	30	15	8	7	-	-	
21~30	144	27	25	2	117	58	50	6	3	-	
31~40	279	27	9	18	250	178	59	4	9	2	
41~50	446	96	16	80	341	275	30	4	32	9	
51~60	180	59	-	59	108	73	10	3	22	13	
61세이상	3	-	-	-	-	-	-	-	-	3	

자료: 성북구청 2002년도

<표 3-5> 자활대상자 학력별 현황

성북구

<표 3-6> 자활대상자 가구형태별 현황

성북구

(단위:명)

가구별	합계	근로능력자								자활 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소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소계	취업 상태	가구 여건	환경 적용	5·6급장 애인		
합계	1,110	237	78	159	846	599	157	24	66	27	
일반가구	562	147	45	102	403	312	79	12	-	12	
노인가구	24	5	1	4	14	6	5	-	3	5	
장애인가구	191	21	8	13	163	62	41	4	56	7	
모자가구	255	47	20	27	206	175	22	5	4	2	
부자가구	69	13	4	9	55	39	10	3	3	1	
기타	9	4	-	4	5	5	-	-	-	-	

자료: 성북구청 2002년도

2) 설문응답자 특성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중 설문응답자 총 100명중 남자 34명, 여자 66명으로 66%의 여성 분포<표 3-6>를 이루고 있으며, 학력의 경우 중퇴한 경우도 해당 학력에 포함시켜 무학 11명, 초등학교가 43명, 중학교가 25명, 고등학교 이상이

<표 3-7> 응답자 성별 분포 현황

(단위: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30세 이하	0	1	1
30 ~ 40세	1	18	19
41 ~ 45세	11	14	25
46 ~ 50세	14	13	27
50세 이상	7	20	27
합계	34	66	100

설문에 응한 자활근로대상자 성비율이 34 : 66으로 여성 참여율이 높으며, 연령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학력은 중학교 이하가 100명 중 80명을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의 평균학력이 중졸임을 알 수 있다.

<표 3-8> 설문응답자 학력별 분포

(단위:명)

구분	학력별				합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합계	11	43	25	20	100
26~30세		1			1
31~40세		3	8	9	20
41~45세	2	11	7	5	25
46~50세	5	11	9	2	27
50세 이상	4	17	1	4	27

자활근로자의 건강은 월 1-2회 이상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적인 질환을 대상이 100명중 30여명이고,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표 3-9> 설문응답자 건강상태별 현황

(단위:명)

구 분	남	여	합계
특별히 치료받고 있지는 않으나여러가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요인으로 취업하여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7	23	40
만성질환(위장,관절,당뇨, 신경성)등으로 월1회-2회 통원치료중	8	22	30
만성질환(위장,관절,당뇨병,고혈압,신경성등)으로 3월3회이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8	9	17
기타	1	11	12
합계	34	66	100

본인이 일을 하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40명에 달한다. 이들 중 40명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상담 등을 통한 개별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집단임을 알 수 있다.

3) 대상자의 선정과정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소득·재산 평가액의 일정 기준이하에 있는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호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여부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2001년도 최저생계비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표 3-10>와 같다.

